

함께 사는 마을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Commons Perspective

장훈교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데모스에서 온 간달프에게 묻는다
제6회 지식 공동체에 필요한 마법!

게스트 | 장훈교 (aka 간달프, 급진 민주주의 연구 조합 데모스)
DJ | 음파 (aka 임테리오 훈공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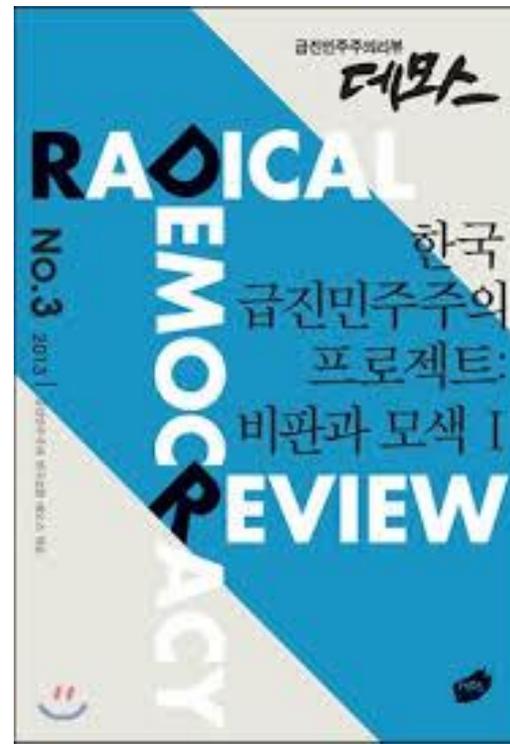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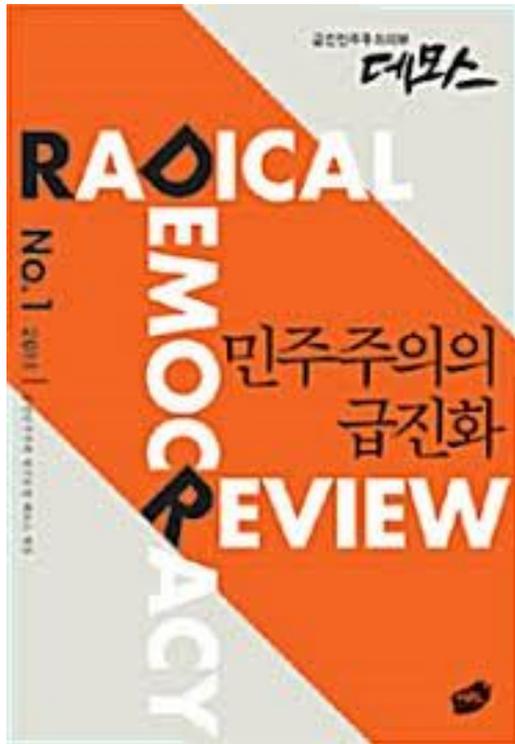
학

공

소



급진 민주주의의 리뷰 데모스: RD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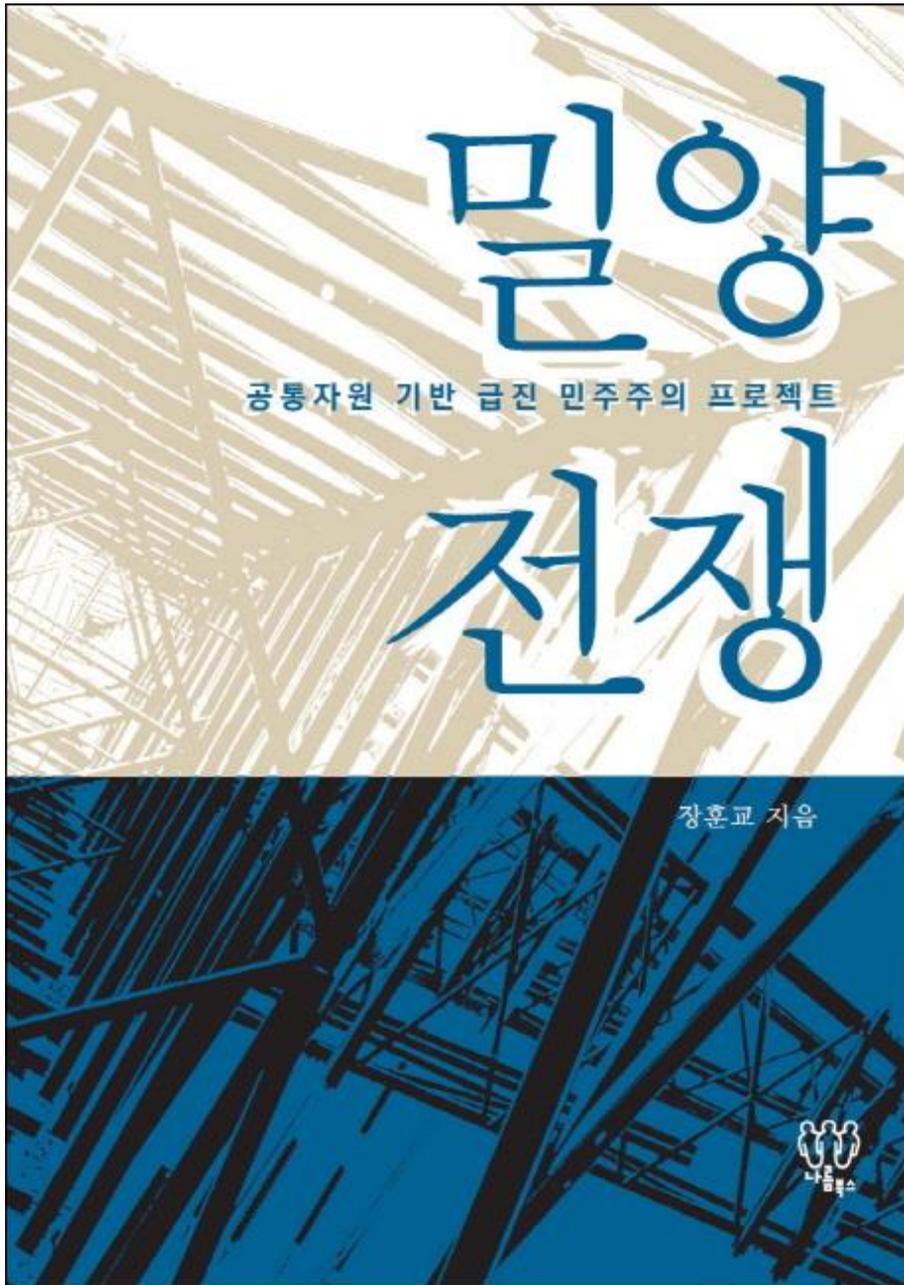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노동의 자기조절 실현을 위한
노동능력의 공통자원으로 전환에 대한 연구
공통자원 개념을 통한 안토니오 그람시 조절사회 개념의 재구성

사 회 학 과
장 훈 교
2 0 1 4







기술로 수작^{手作}부리기:

메이커 문화 · 운동의 현재와 미래

장소 _ 돌곶이 생활예술 문화센터

6호선 돌곶이역 7,8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일시 _ 4월 10일 - 5월 30일 매주 4시-6시



4. 10 (월) 4차산업혁명에 수작(手作)걸기
이광석 문화평론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18 (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적정기술과 손의 감각
김성원 PMA 생활기술과 동아연구소



4. 24 (월) 여성과 기술의 새로운 상상력을 꾀하는 테크노 페미니즘
오영진 <기체평>기획자, 인문학 전문교과

5. 1 (일) 오토마타가 융합하는 과학과 예술의 상상력
전승일 오토마타 아티스트



5. 8 (월) 탈성장, 시민의 메이커스 운동
장준교 공유문화 연구자, 서울혁신센터 사회적인 리서처

5. 15 (월) 기술사회의 역학습
송수연 활동가, 인메이크랩



5. 22 (월) 일본의 메이커문화 속 메이커 미소시메이션 상상하기
신민우 디지털 문화연구자

5. 30 (화) 공통의 감각, 메이커 인문학
임정의 미학자, 연세대학교



주최 _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안원 디지털 문화정책학과, 돌곶이 생활예술 문화센터 후원 _ NRF 한국연구재단







장훈교 지음

일을 되찾자

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나눔박스



좋은 시간 프로젝트 :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이분법을 넘어서

✎ 장준교 연구협동조합 대모스 운영위원장 / garmdall@naver.com



노동시간 단축은 매우 오래된 구호이다. 노동시간의 연장을 지향하는 자본에 대하여 노동의 인간화를 주장했던 노동운동의 전통적인 구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런 노동시간 단축 프로젝트가 IMF 경제위기를 경유하면서 새로운 조건과 직면했다. 자본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 방법으로 노동계약의 유연화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과 안정은 분리되고 불안정 고용 유형이 일반화되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만해고, 임금피크제, 위임규칙 변경 등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또한 이 연장선상에 위치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노동하는 시민을 그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노동과 분리된 시민은 일상생활의 재생산 위험에 직면할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부여하는 모든 유형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할 위험이 높다. 모든 이들을 공장 안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노동시간 단축 프로젝트가 모든 이들을 공장 밖으로 자유롭게 추방할 수 있는 과정과 직면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과 삶의 관계의 재구성

이런 상황에 직면해 노동운동은 노동계약의 유연화가 아닌 노동시간의 단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는 핵심 구호였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 위기에 대한 단순 대응만은 아니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을 위해 전체 삶을 헌신해야만 했던 기존 구조를 해체하면서, 노동과 삶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의 삶은 고유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표준 노동 모델은 이 고유성을 배척하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노동시간 모델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모든 이들의 삶은 각 개인의 고유한 시간이 아닌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조직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이런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일자리의 공유가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면, 노동과 삶의 균형은 노동시간 단축의 전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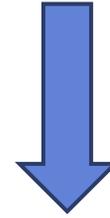


노동시장과 직면한 민주주의

노동시간 단축 프로젝트에 내재된 이런 대응과 전망은 노동시장의 문제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중심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 노동 문제의 전통적인 중심 문제는 노사관계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경유하면서 노동시장 문제가 노동 문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고, 이는 단지 노동 분야를 넘어 모든 이들의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이 노동시장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의 방법을 찾아낼 수 없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분리된 단지 하나의 형식으로 남는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노동시장 문제는 “왜 한국의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인가?”에 답할 것을 요구하는 핵심 질문 중 하나가 되었다.

Commons Based Radical Democracy

전환 과학



사회운동

실험

통치성

헤게모니 프로젝트

체제전환

진지전(war of position)의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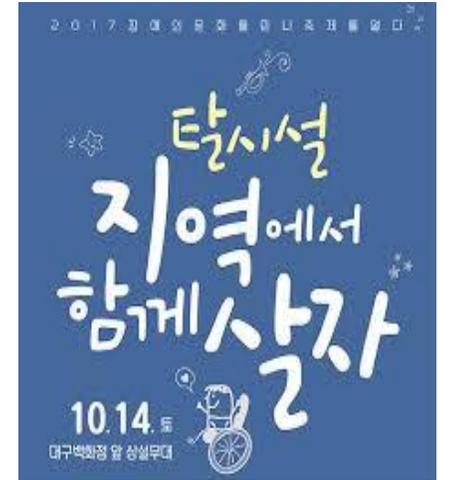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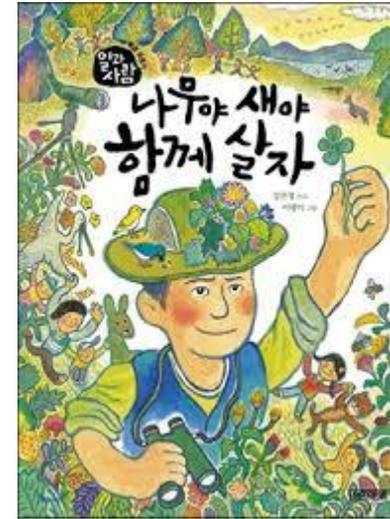


공동자원체계



2050 제주전 환

“함께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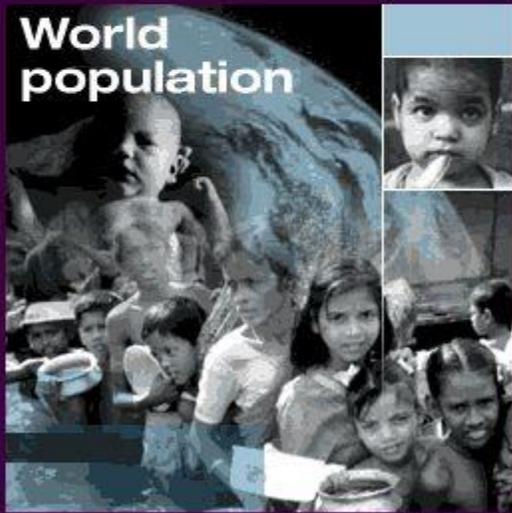




함께 죽
자?

Lifeboat Ethics...

- Garret Hardin maintains that we have a duty to not help the poor and starving of other countries...



- Rich nations are like lifeboats.
- The poor are like the drowning people in the water.
- If we let them into our lifeboat, we will all die.

구명선
윤리



공정(公正)?

제한된 자원의 공동이용 과정에서 공정의 문제가 언제나 등장
노동시장의 분화(1차/2차) 그리고 구직노동 (노동시장의 외부)

공정: 공평하고 올바름
공평(公平):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올바름: 몫에 따라 몫을 주는 것

공동자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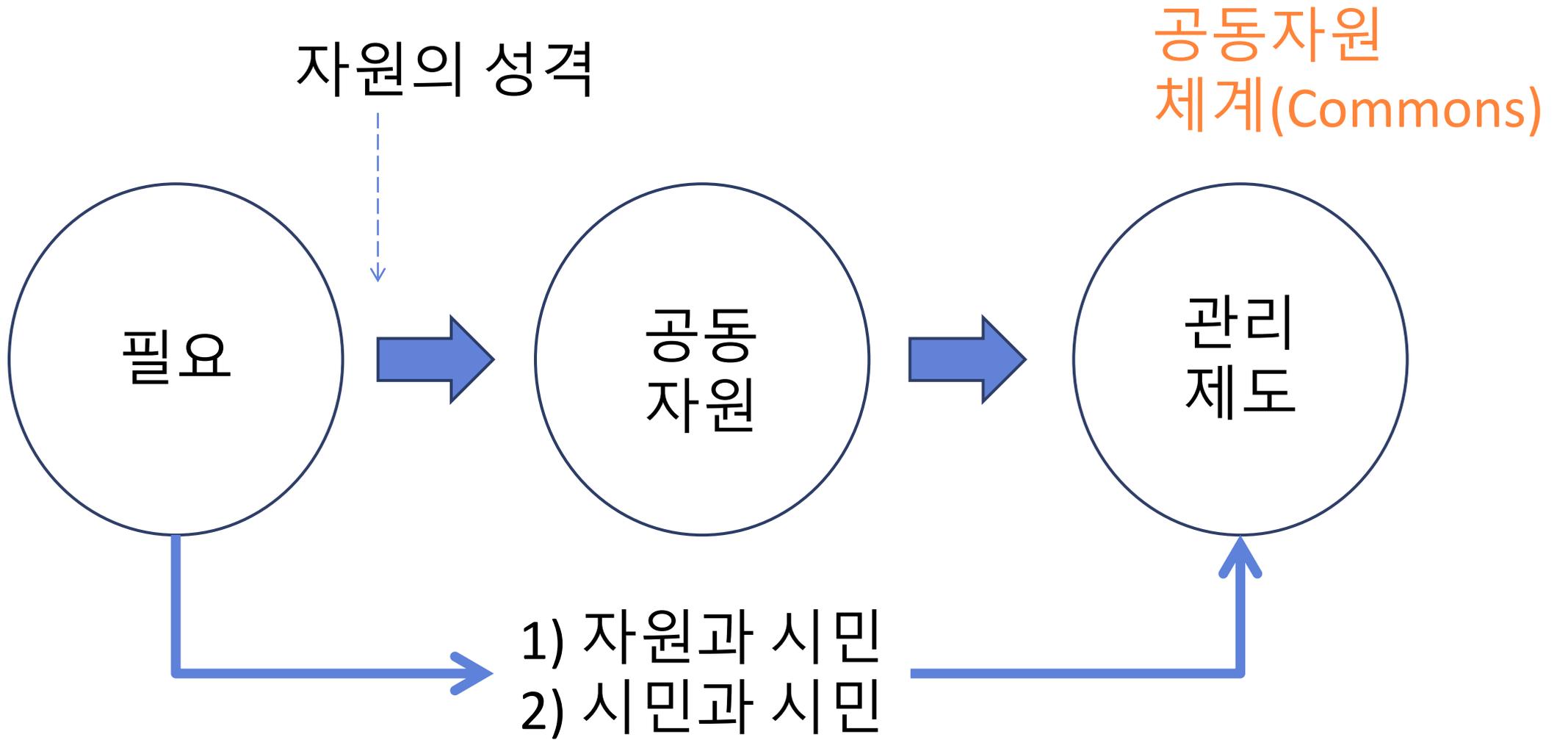
- “함께 살자”는 우리의 바람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 어떤 공동자원체계가 필요할까?
- 현실에서 작동가능한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자원체계의 제도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공동자원체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

- 역사적 접근(Actually existing commons)
-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 접근
- 로마법의 전통
- 민법의 전통
- 철학적 접근/생산양식 접근
- 사회운동이 발전시키고 있는 접근

Collectively managed resources	공동의 자원 그 자체
Social process	관계를 육성하고 심화시키는 사회적 과정
A new mode of production	공동자원에 내재된 새로운 생산의 논리와 과정
A paradigm	공동자원과 공동자원만들기(Commoning)를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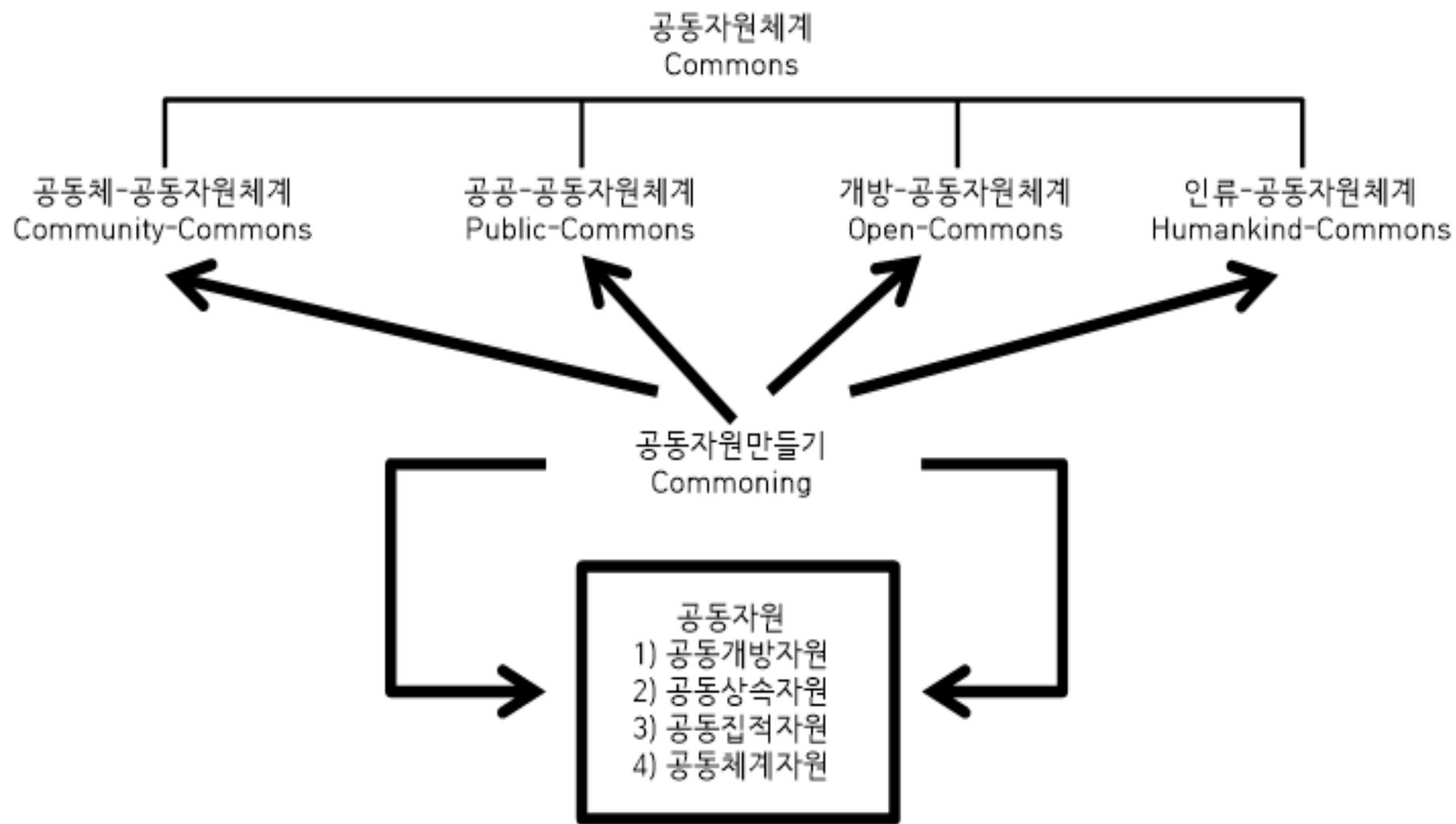
By Silke Helfrich



공동이용의 보장

- 왜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중요: 이 자원 이용의 공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규칙체계가 발전
- 누군가 독점할 수 없다는 걸 의미
- 내가 필요하지 않은 자원을 누군가 독점한다고 문제는 안 됨: 다시 말하면 필요의 지속 그리고 그 필요의 강도 이를 보장 (assurance)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담론이 중요

공동자원의 유형		자원체계의 확장능력	
		높다	낮다
자원체계의 재 생산	낮다	공동접근자원	공동집적자원
	높다	공동상속자원	공동이용자원



공동이용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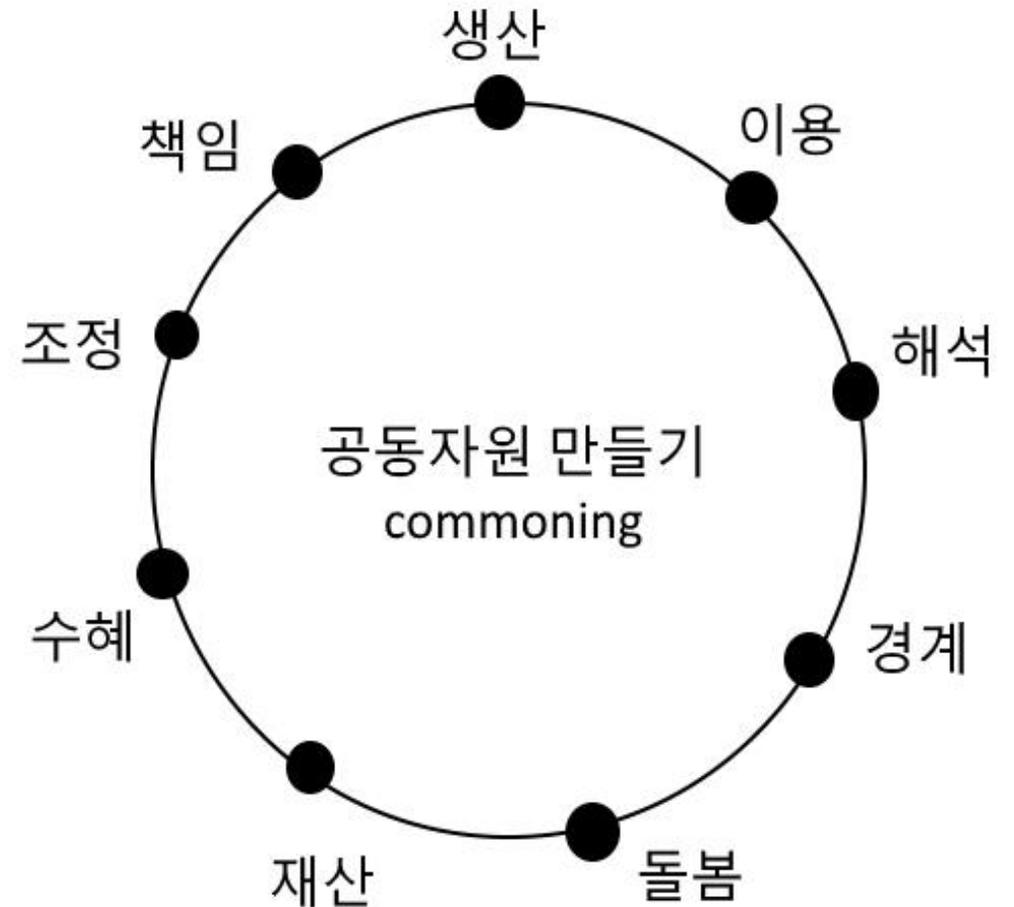
- 공동자원체계는 일차적으로 공동이용하는 자원에 관한 체계
- 이러한 공동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원으로부터 배제되거나 혹은 그 자원을 박탈되는 상황에 대항하여 그 자원의 공동이용을 보장받기 위해 공동자원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 하지만 반드시 배제나 박탈과 연계되어서만 공동이용보장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소비나 문화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공동이용의 자원 확보라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공동관리제도

- 공동자원체계는 그 자원에 관한 동료시민 공동의 관리 제도를 전제한다. 이러한 공동관리제도를 통해 전통적인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을 넘어 필요를 충족하는 대안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엔 동료시민의 공동조정 과정을 통해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문제를 포함한다.

공동자원만들기(communing)

- 자원 구성의 문제
- 동료시민과의 조정 문제





리그 오브 레전드 갤러리

연관 갤러리(5/47) | 갤주소 복사 | 차단설정 | 갤러리 이용안내

- 비비누나 끼룩끼룩.gif
- 젠지 태극기 흑인로고 상남자 반응...jpg
- 1부시절 한체탑 vs 현시즌 한체탑 후보 비교.jpg
- 담원이 피플스틱을 잘쓰는 이유...jpg
- ???카사던님 출전준비하실게요~!!

소나기
ㅇㅇ
ㅇㅇ
ㅇㅇ
갈갈스



젠지 트위터 글이 웃긴 이유 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최근 방문 갤러리 < 리그 오브 레전드 >

전체글 | 개념글 | 공지

50개 < >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공지	2020 LCK 서머 일정표 ! [289]	소리카	20.06.14	92782	780
공지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429]	운영자	19.07.11	423183	161
7683012	Fpx 순위 8위 e ㅇ임? 왜케 운지함	ㅇㅇ (218.236)	21:55	3	0
7683011	진지하게 C9 >> TES 인듯	ㅇㅇ (1.249)	21:55	8	0
7683010	근데 리얼 스포링 풀음중에 k랑 티원만 존나못하네 ㅋㅋ	ㅇㅇ (210.183)	21:55	1	0
7683009	쇼비가 아무리 발악해도 페이커 못 넘는거 맞지?	ㅇㅇ (112.212)	21:55	1	0
7683008	이짤은 누구	ㅇㅇ (185.220)	21:55	16	0
7683007	e ㅇ 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정만 늘어나는데	Apsi	21:55	3	0
7683006	♥비트@소닉가@입하면♥10000원♥지급♥출금@가능♥ [1]	ㅇㅇ (59.23)	21:55	2	0
7683005	롤 브론즈 듀오할 서폿구형	ㅇㅇ (117.111)	21:55	4	0
7683004	LPL도 카사던이 갈리오한테 안말리네	ㅇㅇ (222.104)	21:55	5	0
7683003	요즘 ig 담원 녀글 뇌절 좀 심한건 맞음	ㅇㅇ (39.7)	21:55	19	0
7683002	골드는 휴먼감들었지?	ㅇㅇ (59.4)	21:55	3	0
7683001	고소 당하면 어떡해 ㅠㅠ? [1]	서폿인데헤지...	21:55	24	0
7683000	둘다 신임인데 왜 네네누나만 나옴? [1]	ㅇㅇ (39.116)	21:55	16	1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갤로그 | 즐겨찾기 | 알림

개념글 [NC 다이노스]

1/18 < >

- 팍)월 개뿔해
- 드디어 팍 제진 개엔씨 불펜
- xx 무섭네 사바ㅋㅋㅋ
- 솔직히 필승조들 다 연투했고 5선발 대 1선발...
- 배재환 6월등판일지.jpg
- 배명계만 안냈어도 걔 이렇게 안볼랐을걸? ㅋ...

이슈중^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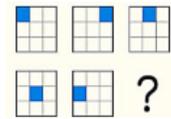
1/6 < >



개콘 마지막회 근황...jpg

뉴스^N

1/10 < >



당신의 IQ는 얼마입니까? - 국제 IQ 테스트 international-iq-test.com



[감독판] 3요리 신생 아들의 황당 질문 ... 보다



크로스 "UCL 결승 패배한 뒤 의사 부를 ... 풋볼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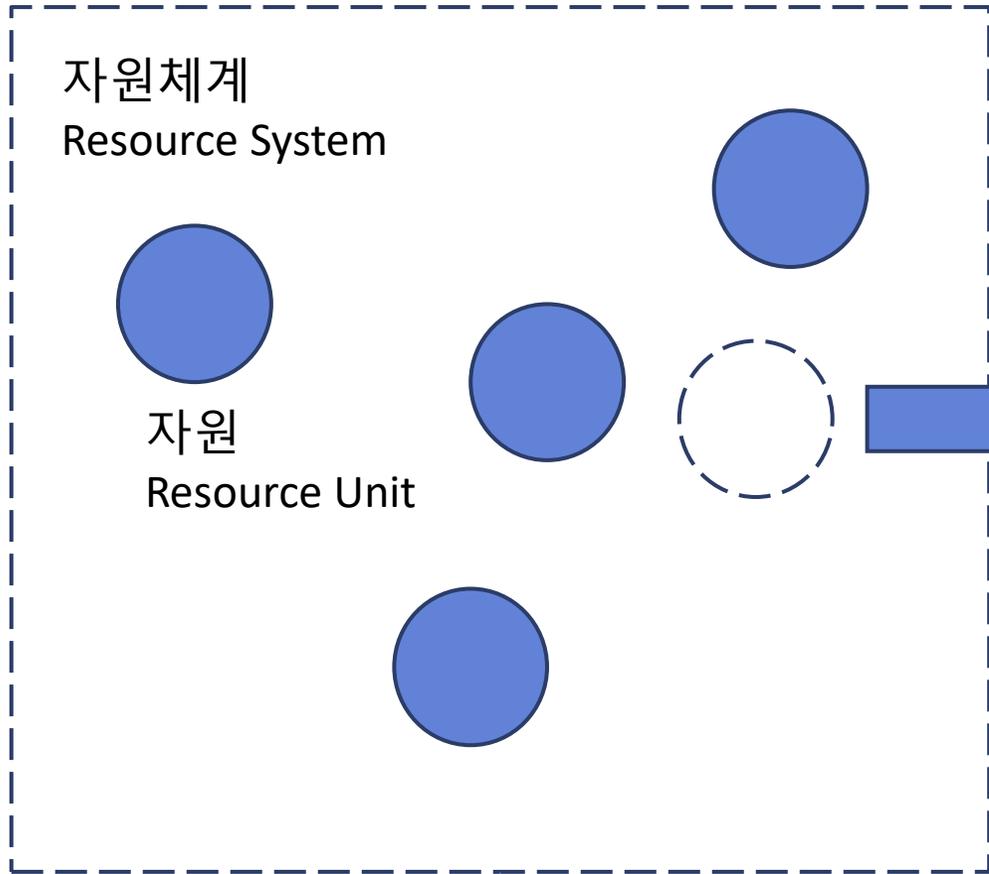
시민과 안전의 분리

- 공동자원체계에 관한 현재의 열정은 기본적으로 시민과 자원체계가 분리가 격화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 시민 안전의 위기
- 기존 결사(association)와는 다름
- 시민 안전의 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시민과 자원체계의 결합 방법에 관한 모색 --> 안전과 자율성 그리고 타자로부터의 지배를 넘어서기 위한 모색들
- 한국에선 특히 소유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안소유화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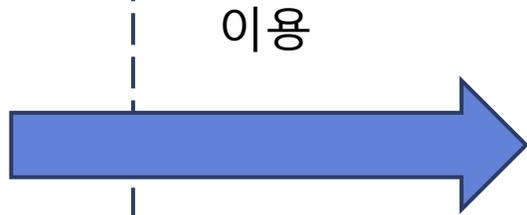
CBNRM

- 공동체 기반 자연자원 관리 모델(Community-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 CBNRM --> Commons의 역사 모형 --> 이 모형의 재해석 -->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보다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모델에 관한 보고는 많이 없음: 현대 Commons 논의의 가장 취약한 지점
- 특히 공동자원체계를 사회 전환의 매개로 바라보는 이들에겐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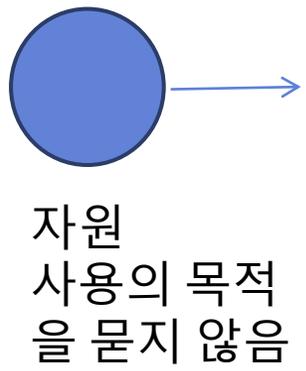
자원체계란 지속가능한 자기재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 1) 자원체계와 인간의 관계 조정
 - 2) 인간과 인간의 관계 조정
- 이중조정 과정이 필요
 - 인간의 필요와 자원체계의 지속가능한 재생산이 연결된 모형(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님: 성공한 공동자원체계인 경우만)



계속 이용하려면
자원체계를
관리해야함



공동관리의 핵심은
공동돌봄



“Isolated, anonymous individuals overharvest common-pool resources.”
BUT...

Nobel Laureate Elinor Ostrom
(1933-2012)

Photo credit: Chris Meyer



2012 © Owen Gaff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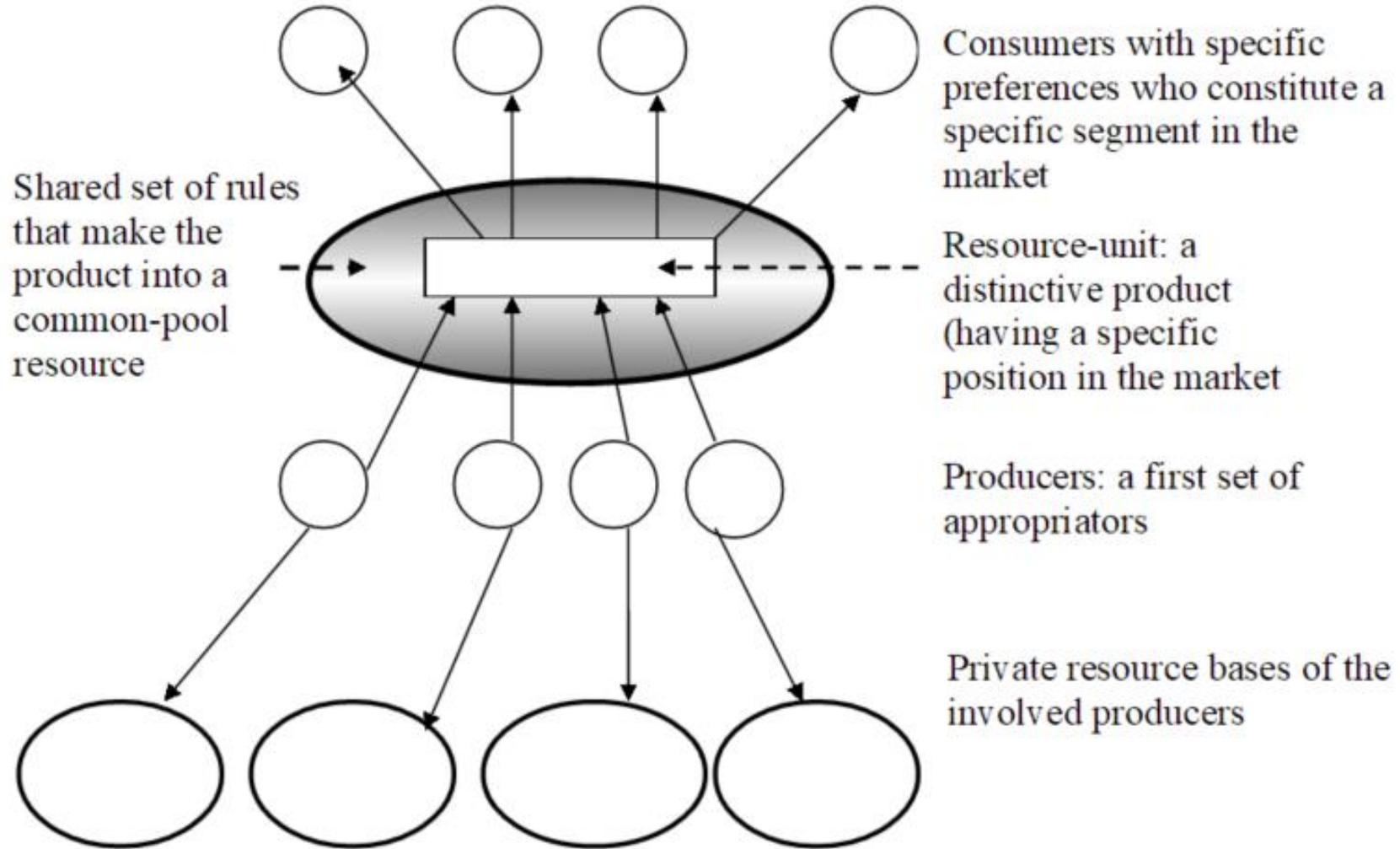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선 공동체의 특징

명확한 경계	공유자원의 범위와 그 사용자가 분명해야 한다
규칙의 부합성	쓸 수 있는 자원의 양 등을 정한 규칙은 현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
집합적 선택장치	규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규칙 수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감시활동	공유 자원의 현황은 적극적으로 감시돼야 하고, 단속 요원은 사용자 가운데서 선발돼야 한다
점증적 제재	규칙을 위반한 사용자는 잘못의 경중(輕重)에 따라 차례로 강도가 높아지는 점증적 제재를 받는다
갈등 해결 장치	사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수준의 갈등 해결장치가 있으며, 당사자는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	사용자들이 스스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국가 같은 외부 권위체에 의해 도전받지 않아야 한다.

자료: 《공유의 비극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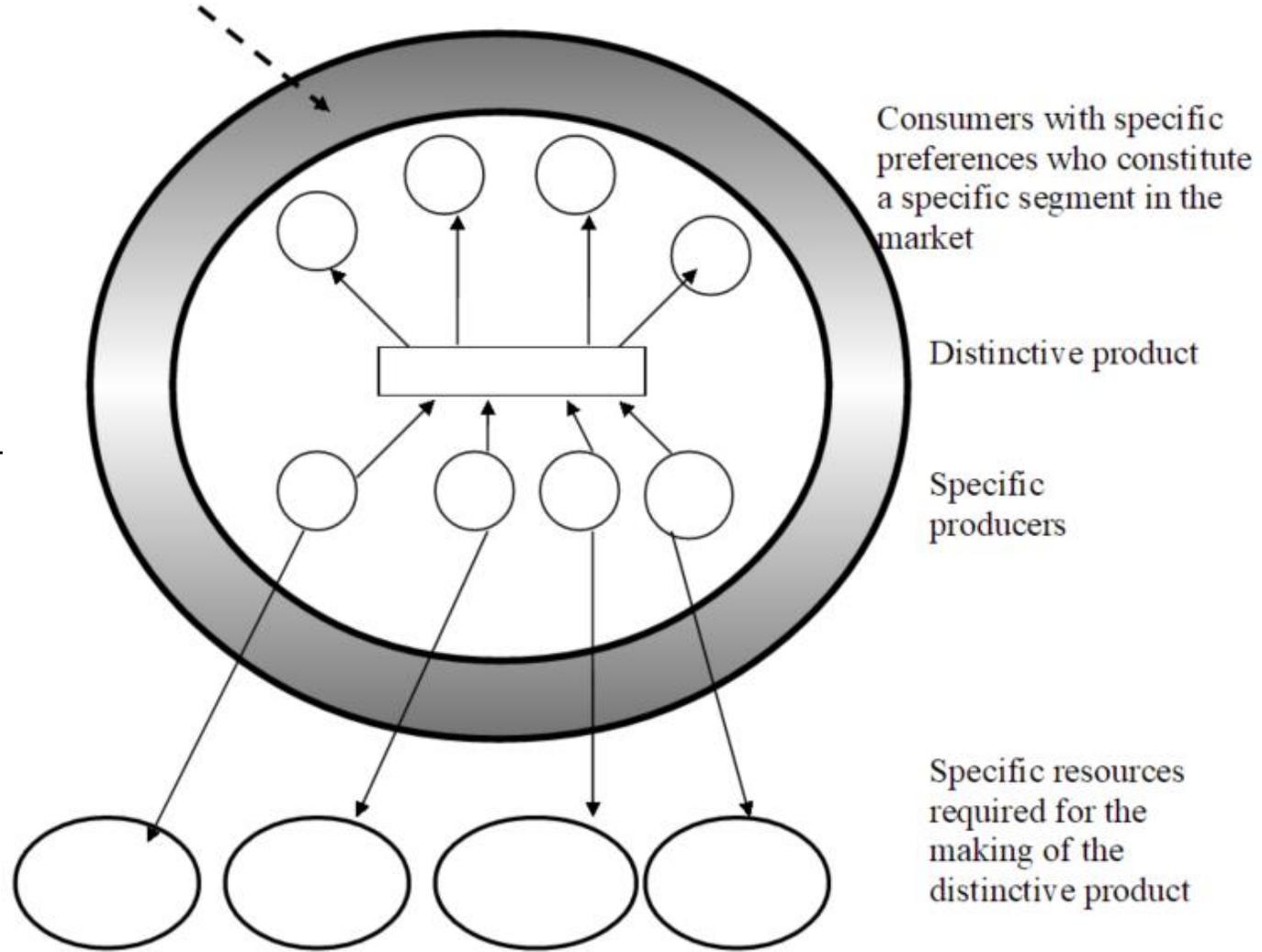
Figure 3: common-pool resources that are central in rural development processes

단위자원을
모아서 만드는
공동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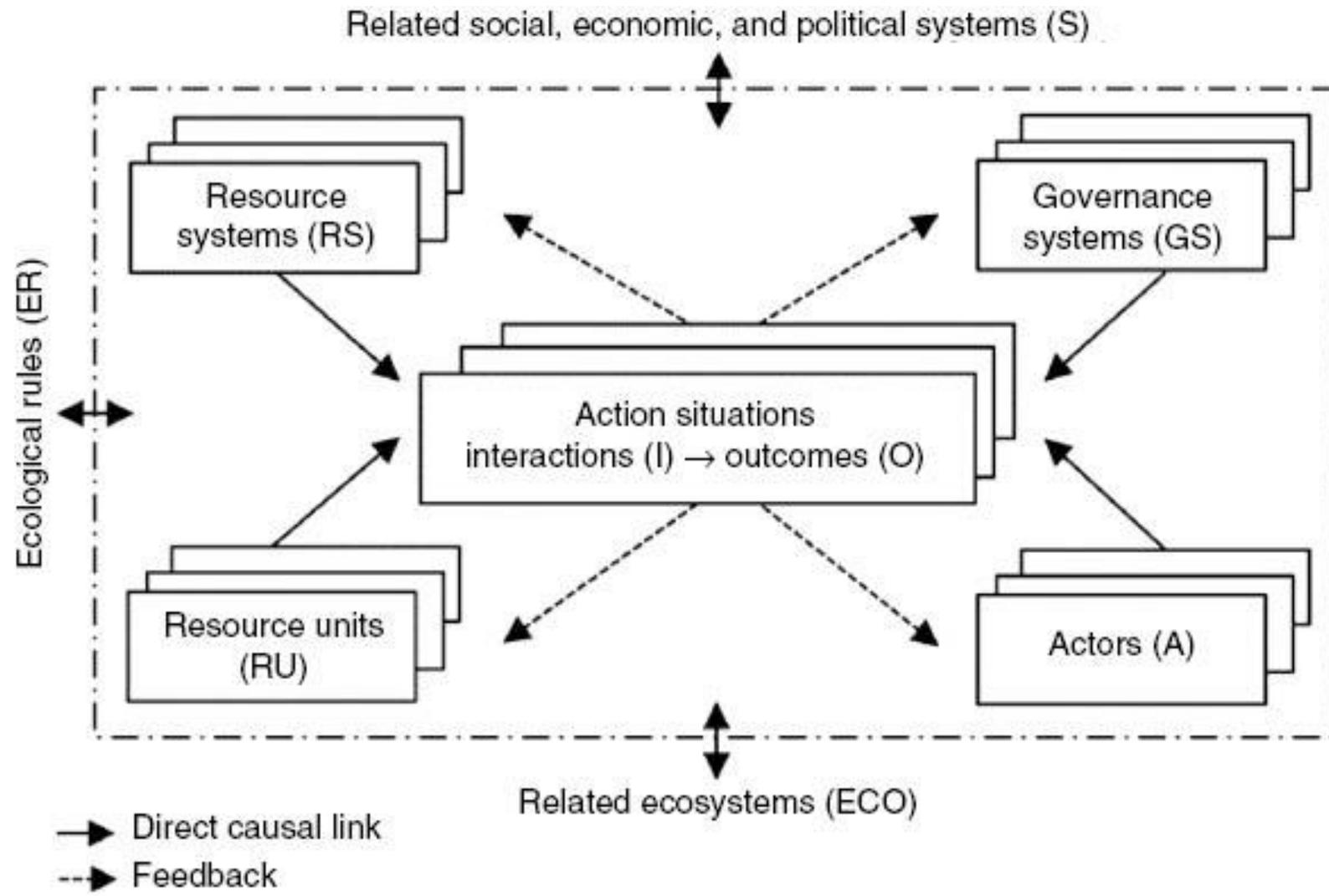


Shared normative framework (more or less institutionalized) that (1) developed around a CPR and (2) defines and sustains a nested market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이
시장을 이용하는
규칙을
정한다면?



- 단위 자원을 모아 공동자원을 만드는 경우는 각 개인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에서 오는 수익이 존재하는 경우 --> 즉 common-pooling이 필요할 경우 --> 그러나 이경우엔 Common-pooling의 재생산이 자원체계 자체의 힘으로 보장되지 않음 --> 계속적인 단위 자원의 집적과 집중이 필요
- 각 개인의 소유가 그 개인의 이익을 오히려 한계 지우는 경우에는 그 소유의 범위를 넘어 이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공동이용의 풀을 만들 수도 있음: 공동목장



-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가 분리될 수 있음: 국가가 제도를 마련하되 공공재와 그 서비스의 공급은 실제로는 현지에 지식을 갖고 있는 이용자 집단이 운용할 수 있음 --> 보충성의 원리: 정부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문제에 관해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일단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동시에 이는 시민자산화 등과 같은 요구에 시민사회가 더 나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함.

공유(共有)

- 한국에서 공유는 공동소유의 준말: 곧 두 사람 이상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말함
- 1990년대 이후 컴퓨터공학의 번역 용어로 [공유]라는 말이 확산 --> 같은 자원을 다양한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걸 말함: 이때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방법과 무관하게 '공유'라고 번역함 --> 공용(共用)이 아니라 공유라고 번역한 이유는 알지 못함
- 200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에서 공유라는 말이 매우 폭넓게 활용됨: 핵심 특징은 소유와 분리되었다는 것 그런데 동시에 소유와 결합하고 있는 이중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총유와 특수지역권

- 한국 민법은 매우 특이한 성격을 지님: 총유 규정과 특수지역권(제302조) 규정은 그 중 공유와 연결되어 있음 --> 전근대적 사문화된 규정이라 하여 삭제될 위험에 처해 있음 (2013년의 예) --> 공동체가 소유할 수 있는가? 소유는 개인만이 가능한가? 공동체의 소유도 결국 공동체의 수장의 소유인가?
- 일본의 입회권 --> 한국의 특수지역권: 한국의 민법학은 이를 총유에 근거하여 설명: 꼭 그런지는 모르겠음(반론이 있음)

특수지역권

-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
- 지역권?: 자식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그 지역과의 특수한 관계가 인정될 경우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 왜 보장했을까?
- 방목, 가축통행, 산림벌채 등

분할소유권: 중세

- 중세 봉건적 질서 안에서 토지소유권을 분할하는 방식 중 하나
- 토지의 상급소유권(궁극적인 토지소유권) - 토지를 소유하는 개인의 중급소유권(토지 처분권) - 토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자들의 하급소유권(토지 이용권): --> 이 층위를 봉건적 질서 아래 묶어 놓음(궁극적 토지소유자인 영주는 그 계약에 의거 신민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짐, 토지 처분은 영주의 제약(자의적으로 처분 못함))

소유와 공동, 안전의 보장

- 소유에서 분할소유, 다중소유, 총유 등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는 이유는 소유하는 물건 혹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은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배타적 소유로 남겨두지 않으려는 것
- 인민의 안전 보장: 이것이 전근대적 질서에 남아 있던 전근대적 계급계약 관계 혹은 도덕경제의 흔적 아래 도덕적 공동성 아래 개인의 소유를 제약하는 것

- 근대경제로의 이행에서 사적 소유권의 확립이 차지하는 의미 --> 이 전근대적 근대성을 과거의 것으로 해체시켜버리거나 폭력적으로 해체 --> 그러나 토지의 소유는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것으로 알려짐(근대/전근대의 이분법을 넘어 토지지배의 양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문제는 근대에서 소유권을 제약하고 있던 과거의 공동성(인민적 공동성)이 소멸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 --> 이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해나갈 것인가?

재난과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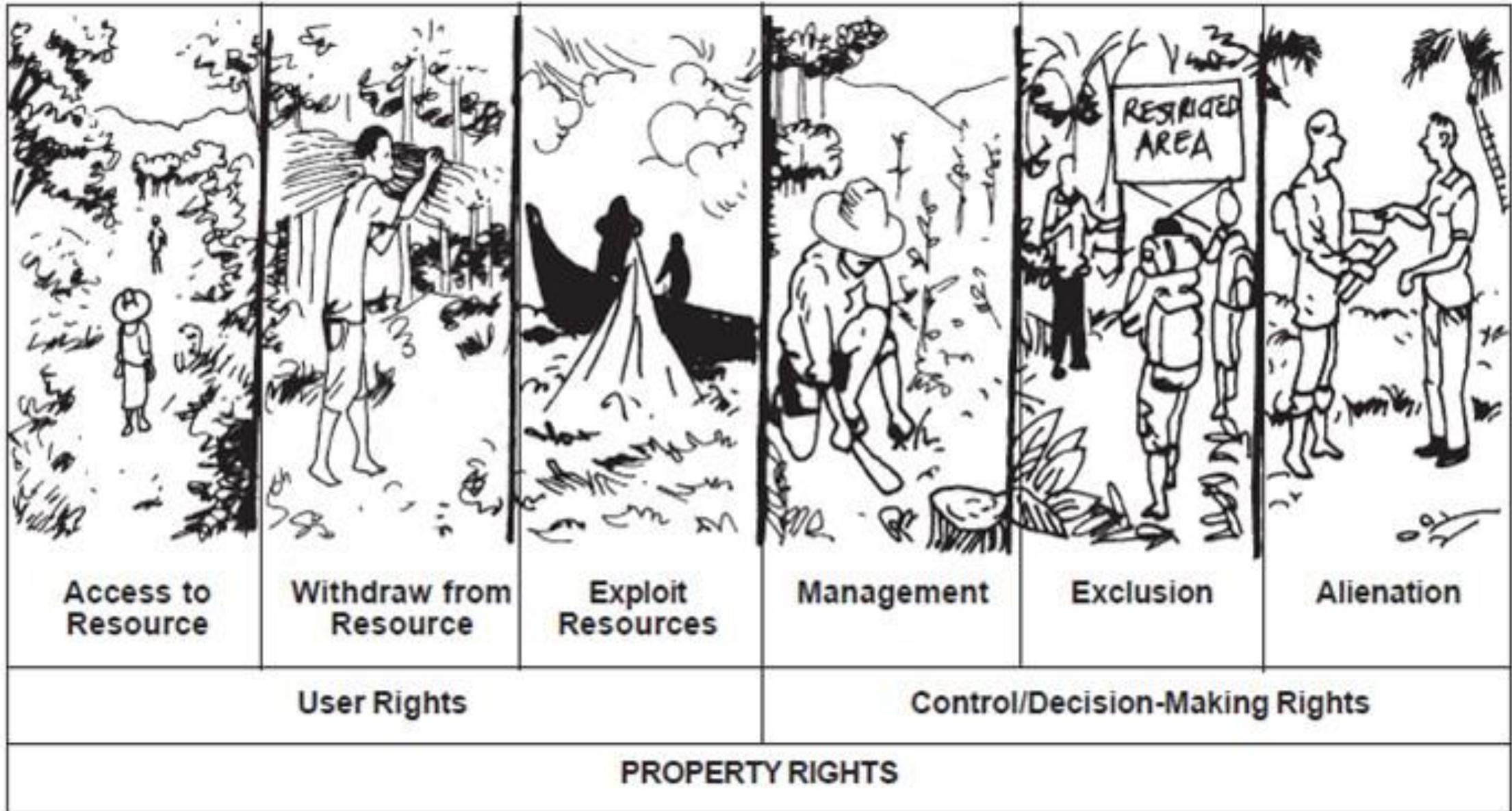
- 재난 상황은 기존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만들 --> 소유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임대료 깎아줄게요"...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확산

소유권: 권리 다발론

- 권리 다발론(bundle of property rights): 소유권은 하나의 권리가 여러 권리의 묶음으로 존재한다는 견해, 중요한 건 이용과 통제/결정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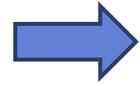


“소유자는 국가”...회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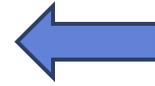
KBS NEWS 9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천억 받으면 줄 것”

소유주
Ow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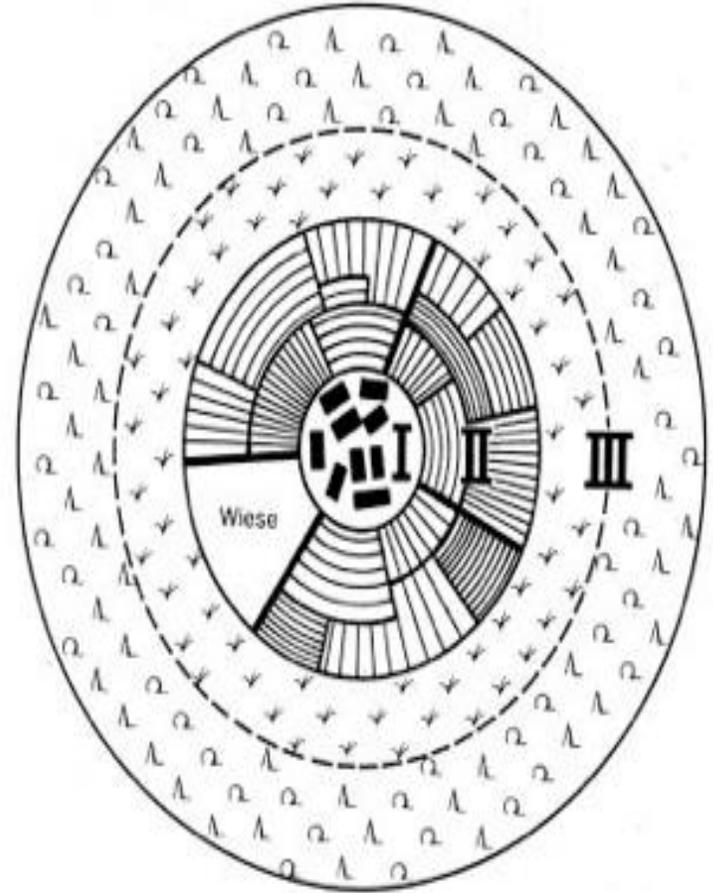
권리의 담지
Rights for Use



자원

공유지

- Commons를 왜 공유지라고 번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아마도 잉글랜드 중심의 인클로저 역사가 국내에 소개되는 과정이나 중세 장원의 Common Land 등을 소개하는 개념이 국내에 먼저 소개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
- 토지는 Commons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지만, Commons를 토지로 환원시키면 다른 자원과 인간의 결합 관계를 해석하는데 일정한 장애가 발생



Ring-shaped model of a village: I village with gardens, II fields and meadows, III common pastures and woods (Rösener 1985, 56)

- Commons는 지속적인 갈등의 원천이었음 --> 갈등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공유지에 관한 이용규칙이 정해짐: 특히 한 지역 경계가 아니라 한 지역을 넘는 경계에 걸쳐 있는 규모가 큰 Commons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음
- Commons가 없어지게 된 이유는 외부의 힘뿐만 아니라 내부의 변화도 큰 역할

CUSTOMS IN COMMON



E. P. THOMPSON

'One of the most eloquent, powerful and independent voices of our time' - Keith Thomas in the *Observer*





최적의 방안 도출

•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연구(19)

수질 개선

- 유해물질 모니터링
- 폐수전량 저감,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고 예방·대응

- 산업단지 원종거류시설
- 지하수 인공 함양, 강변 여과수 비상급수체계 구축

취수원 다변화

- 대체 수자원 개발, 취수원 이전 등 가용 수단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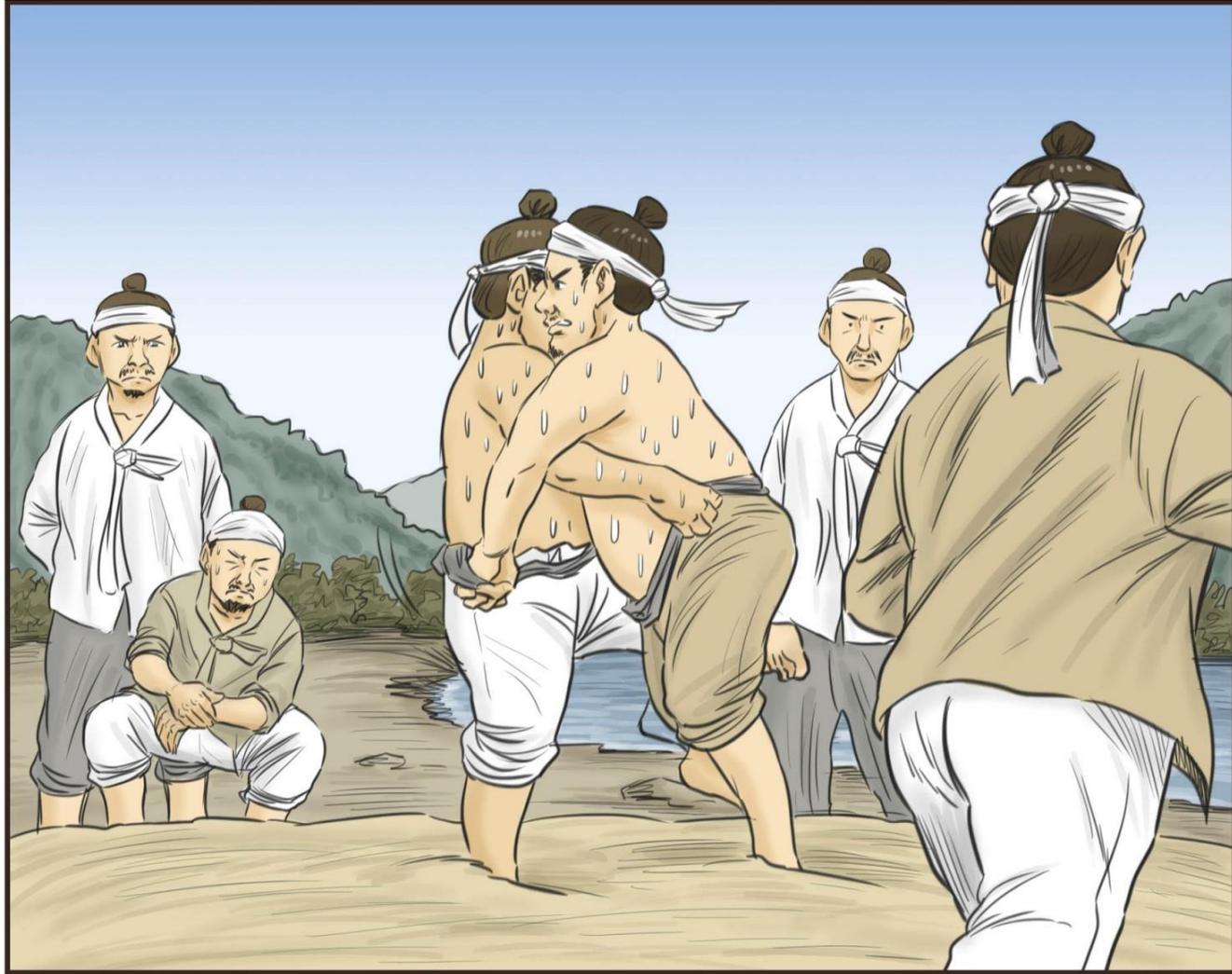
충분한 대화·소통

• 영결 구강별 논의 → 낙동강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에서 종합·결론 도출

모든 유역 주민이 만족하는 최적의 물 배분·공급 방안

• 낙동강 물 문제 해결 종합대책(19.말)





완도군 도장마을
앞의 칠기도:
해조류가 많이
나는 칠기도의
관리권을 두고
촌락간 갈등을
씨름으로 해결
(지역설화)

공동자원체계의 구성적 외부: 경계

- 공동자원체계는 '우리'의 자원에 관한 우리의 이용 규칙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외부'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음: 이를 '구성적 외부'(constitutional outside)라고 부름
- 다시 말하면 경계가 존재: 경계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계를 만들 것인가가 공동자원체계의 제1 질문

모두의 것

- 공동자원체계의 또 다른 역사적 기원 중 하나는 로마법(Roman Law)의 “Res Communis” --> 이는 현재 국제법에 “인류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개념에 반영되어 있음
- 유스티니아누스 1세(6세기): “자연의 법에 따라, 아래는 인류 모두의 것 (common to mankind)이다. 공기, 흐르는 물, 바다, 그리고 바다의 해안.”
- 이 개념의 반대는 “Res Nulius”: 누구의 것도 아닌 것

거래할 수 없는 것

- Res extra commercium; 不融通物
- 로마법은 사물을 거래할 수 있는 범주(Res in commercio)와 그렇지 않은 범주(Res extra commercium)로 구분하였는데, 불용통물이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물의 범주를 의미한다. 이 범주에 속한 사물들은 '소유'의 대상일 수 없었고, 상업이나 무역 등과 같은 거래의 대상일 수 없었다.

- 거래할 수 없는 사물의 범주는 (1) 신법상의 사물(Res divini iuris) (2) 인법상의 사물(Res humani iuris) 두 유형으로 나뉘어 있었다. 단순히 말한다면 인간 세계 바깥과 연결되어 있는 신성한 사물들과 인간 세계 안에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물을 유형화해서 분류했다. 인법상의 사물들로 여기엔 (1) Res communes omnium (2) Res publicae (3) Res universitatis의 세 유형이 존재했다.



Nature Not For Sale

Challenging biodiversity offsetting and the financialisation of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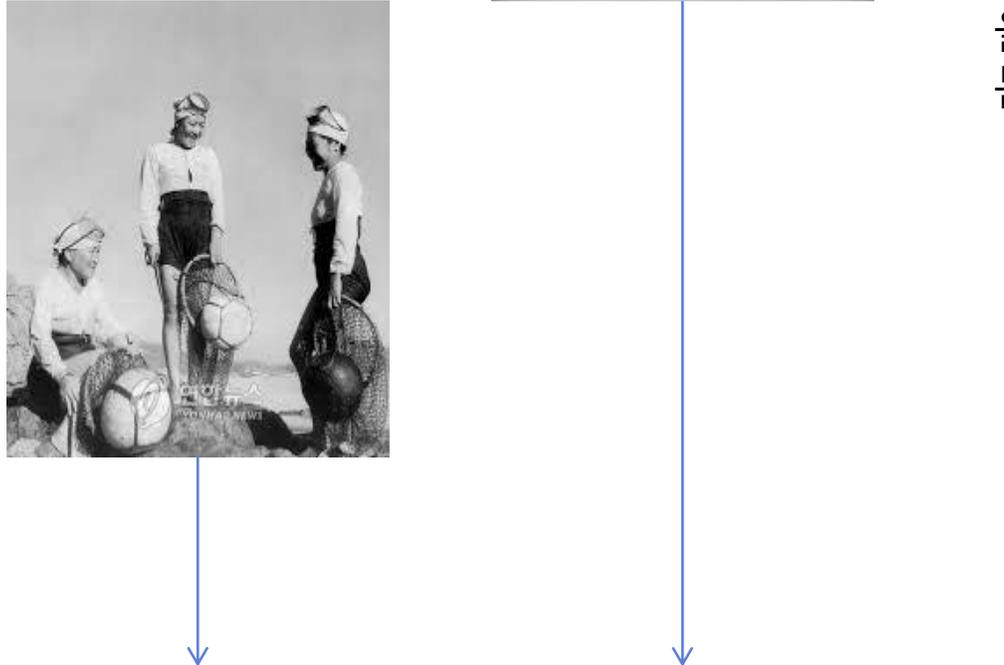
Everything For Everyone,
Nothing for Us

공동자원체계의 공정(公正)

약자(弱者)보장의 원리



바다 이용의
 공정성
 : 기술과 이
 용, 그리고
 약자와 강자
 의 공동이용
 을 보장하는
 문제



ANALYSIS

How a Black Commons Could Help Build Communal Wealth

BY JULIAN AGYEMAN &
KOFI BOONE

🕒 5 MIN READ

JUN 26, 2020



A group of former slaves that gathered on the former plantation of Confederate Gen. Thomas Drayton, which they began to harvest for their own profit.

PHOTO BY CORBIS/GETTY IMAGES

인간 너머의 공동자원체계

- 인간 너머의 공동자원체계(The more-than-human commons)
- 공동자원체계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이용하는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 --> 자원이란 경제학의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 --> 이런 인간의 이용과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이 현재 등장하고 있는 인간종의 위기에 응답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 가능
- 공동자원체계는 인간의 이용이 결합될 때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거나 대립시키는 것이 아님

거주

- 비인간 존재자는 단지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행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과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관계에 관한 내용을 품고 있음
- 공동자원체계는 따라서 경관과 인간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거주 실천의 산물 (예) 나무와 건물

- 그럼에도 공동자원체계가 인간의 합의 혹은 협업에 기초를 둔다는 점은 변함 없이 작동 --> 이 점이 공동자원체계의 장점인지? 아니면 공동자원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또 다른 비인간행위자와 자연의 일 곧 공동성(communality)의 확장이 필요하고, 이에 일(work)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지에 관해 고민이 필요

공동재산체제

- 공동재산체제(Common Property Regime)는 공동자원체제의 한 유형으로, 공동자원체제 그 자체와 동일하지는 않음
- Commons는 일차적으로 공동이용, 공동생산, 공동관리의 문제이고, 공동소유만이 이를 보장하는 건 아님
-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와 공동체운동 내에서 공동재산체제에 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음 --> 이는 한국의 소유양식에 내재된 약탈적 성격(공동성의 제약을 넘어서는)때문으로 보임
- 공동자원체제는 대안소유(alternative ownership) 운동의 특성이 강함

촌락 공동 재산

- 전통적인 형태의 공동체 재산(communal property): 마을 단위 공동의 필요 (성과 속)
- 공동체 재산은 촌락 단위로 소유하는 재산: 촌락의 대표나 촌락의 회의 기구 --> 전통 촌락은 주요 자원체계의 통제를 위해 통상 이중구조로 구조화 되어 있음 (1) 촌락회의(마을총회) (2) 자원 관련 회의(어장: 어촌계)
- 입호(立戶)와 입어(入漁): 자원의 이용에는 특정한 승인이 필요

- 공동재산체제는 재산을 한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방식 곧 한국의 법정 용어로는 공유(共有)하는 방식으로 운용: 공유의 방식은 현재까지 집단에 속한 개인의 권리 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가능
- 공동재산체제가 개인재산체제보다 더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음 곧 이는 조건적:

제주 도두1동 마을회관: 공항공사하고 제주도에서
지원받아 마을재산이 됨(5억)



마을재산은 마을소유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유와 동일함: 곧 마을의 독점적 소유



백종원 시가 매입했다고 알려진 도두2동 마을회관



농촌: 생산주의에서 소비주의로 변형되면서 공동목장 또한 그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 --> 대규모 개발업자들의 목표가 되었고, 실제 제주의 대규모 개발은 공동목장 부지를 이용해 이루어짐 --> 공동목장을 사람들이 소비하는 방식을 찾아 공동목장을 유지시키는 사례가 늘어남

개인, 공동 그리고 공공

- 공동은 한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활동을 조직하는 원리: 개인과 공공 사이에 존재하는 규모의 차이 --> 개인과 전체 사이에서 동료시민과 함께 상호조정을 통해 필요를 충족시켜나가야 하는 규모의 영역이 존재
- 이 규모의 영역은 (1) 공공의 보장이 존재할 때 (2) 그리고 동료시민 모두가 그 필요에 공동구속되어 있을 때 (3) 그 필요를 조직하는 공동조정 활동 가능성이 제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공동과 공공이 충돌할 때?





제주 오일장 할머니장터 분쟁 사례: CPRs 상황의 대표적인 예





[사례]
제주 해녀-다이버 갈등 사례



[사례]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제주 송당리 주민-시민(조직)
갈등



알프레드 야르(Alfredo Jaar): 스코그할 예술관





선물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 선물이 소멸하는 순간에 나타난다 --> 마을에서 무엇인가가 진짜 부족하다?

공동자원체계의 딜레마

- 자원 이용의 공동성: 대부분의 문제는 공동 이용에서 나타나는 자원 파괴의 문제였음(이른바 무임승차자의 문제) --> 과잉이용(Overuse)의 문제라고 하기도 함
- 그런데 최근 일본 학자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체계임에도 과소이용(underuse)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기 --> 숲을 이용하지 않아 숲의 관리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
- overuse와 underuse 모두 우리에게 중요

- 그에 반해 내가 제주에서 발견한 핵심 문제는 주민과 시민 사이에 특정 자원체계를 둘러싼 갈등 문제 었음: 여기에서 주민은 특정 장소 곧 촌락과 연결되어 있는 이들을 말함 -->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위해 장소를 판매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민들의 개입들
- 이를 부당한/부적절한 이용(inappropriate-use)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음: 시민은 여기에서 어떤 권리로 개입할 수 있는가? --> '우리'의 자원이 아닌 '모두'의 자원: 소유와 점유를 넘어선 모두에게 상속되어 있는 혹은 모두가 만들었기에 그 소유가 한정되는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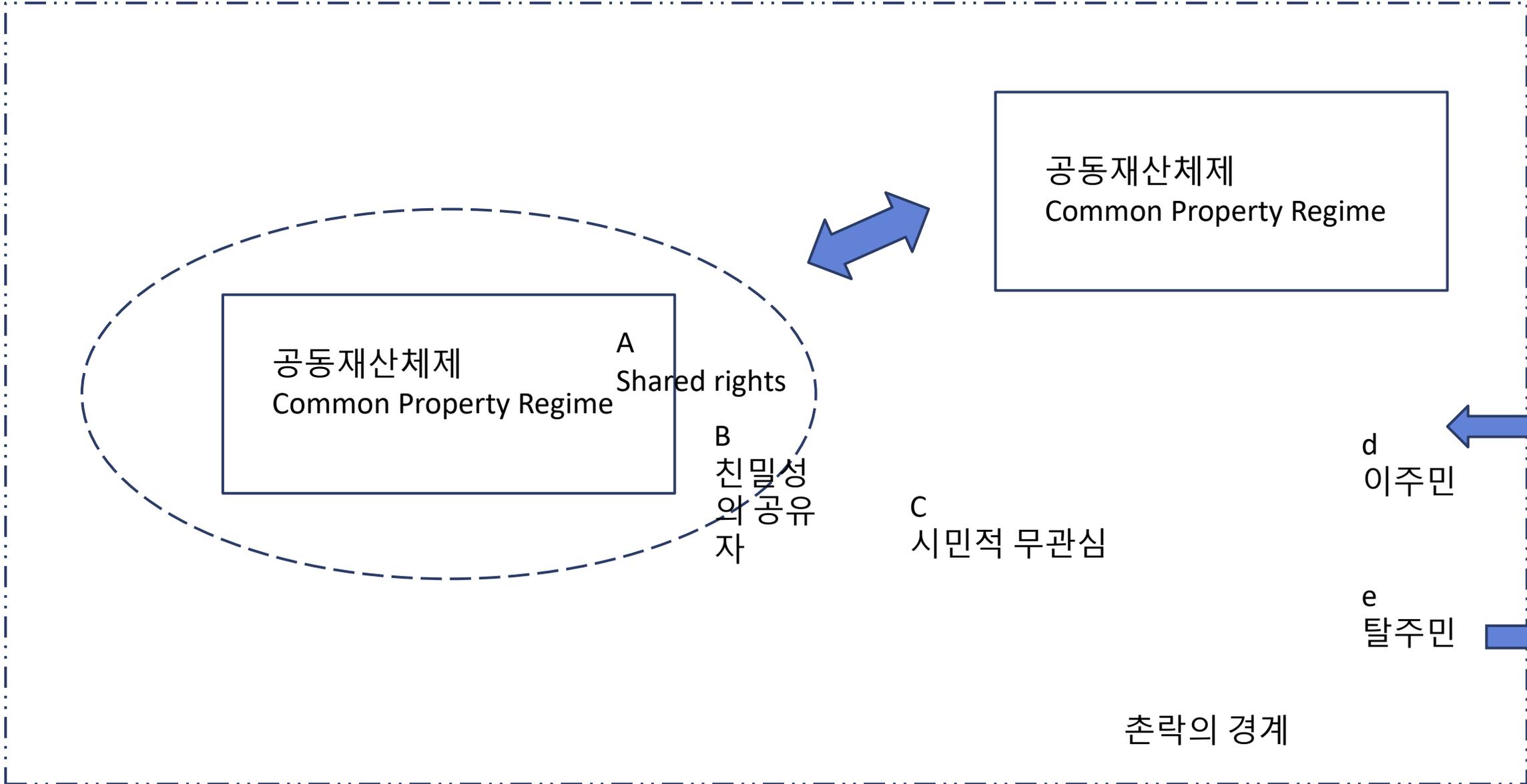
어떻게 조정할까?

- 공동자원체계와 시민과의 관계: 공동자원체계는 다른 시민을 지배하거나, 다른 시민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자원체계로 작동시켜서는 안 됨 --> 곧 공동자원체계는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됨
- “비지배의 자유”라는 공화(共和)의 원리
- 사회적 분배(선분배와 재분배)를 통한 비지배 조건의 구축 --> 공동자원체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공화의 조건 구축을 위한 공동자원체계
- 사회적 상속의 원리

공동체주의를 넘어

- 공동자원체계에 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의 한계:
- 공동체의 자원 운용은 시민 전체가 합의하고 있는 자원 이용의 규칙에 종속되어야 함: 공화국의 재발견 --> 공화(共和)의 원리(이를 '헌법적 선택'의 문제라고 함)
- 공화로 관리되지 않는 공동자원의 비극: 다른 시민의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그들을 지배하는 자원으로 이용되는 공동자원 혹은 다른 시민의 삶에 무관심한 자원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 전제(專制)적 공동자원체계를 넘어 시민의 공동자원체계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여기에서 가능:

- 그에 반해 내가 제주에서 발견한 핵심 문제는 주민과 시민 사이에 특정 자원체계를 둘러싼 갈등 문제 었음: 여기에서 주민은 특정 장소 곧 촌락과 연결되어 있는 이들을 말함 -->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위해 장소를 판매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민들의 개입들
- 이를 부당한/부적절한 이용(inapproate-use)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음: 시민은 여기에서 어떤 권리로 개입할 수 있는가? --> '우리'의 자원이 아닌 '모두'의 자원: 소유와 점유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상속되어 있는 혹은 모두가 만들었기에 그 소유가 한정되는 자원?



무관심

- 공화국의 시민권은 시민적 무관심을 용인
- 그런데 공동자원체계는 그러한 무관심에 관해 용인하기 힘들
- 공동자원체계에 관한 시민의 무관심을 용인할 수 있는 구조(공적 구조)

- 헌법적 규칙: 다중심적 단위들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단위들 사이의 공동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상위의 규칙
- 다중심적 체계는 헌법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구성될 수 없음

다중심적 체계로서의 마을?

- 전통 촌락은 마을에 단 하나의 중심이 존재 --> 주민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회의 구조
- 하지만 현대 촌락은 다중심적 조건(polycentric condition)임 --> 다중심적 조건에서 다중심적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촌락의 자원을 공동이용하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 과제

농촌 주민의 이동성

- 촌락/농촌/공동체의 경계는 언제나 열려 있음
- 농촌 지역 밖으로의 청년들의 탈촌화 & 인구감소 --> 지역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관행의 약화와 지역기관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주민 수의 감소
- 농촌으로 진입한 신규 이주민: 기존 관념에 이의 제기, 그 의미와 실천을 둘러싼 갈등 초래
- 임시적으로 머무는 사람들 (예) 한달살이 등
- 세컨드 홈 소유주, 이주노동자

강정마을 10년 미만 거주자 주민 자격 상실...향약개정하며 이전 주민 소급적용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1.31 11:51 | 댓글 1



강정마을회는 30일 저녁 총회를 열고 주민 자격을 기존 5년 경과이던 거주 기간 조건을 10년 이상으로 늘렸다.

마을회는 "마을의 구조가 다변화되고 주민의 증가 등으로 향후 마을의 자치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공동체회복사업 등으로 인한 혜택 및 수익사업이 활발히 이뤄졌을 때 원주민들의 공동의 분배 또는 혜택 등의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향약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향약개정 안건 상정의 이유를 밝혔다.



향약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 주민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동체회복사업 등을 통한 혜택 및 수익의 분배에서 배제되게 된다. 피선거권은 물론 투표권도 갖지 못한다.

이번 총회 결과 지난 11년 동안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앞장서며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 낸 이주민들까지 주민 자격을 상실했다. 거주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서 이전 거주자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했기 때문.

사실상 해군기지 반대 운동 진영의 주민 자격을 박탈할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강정마을회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처럼 향약을 개정하면서 이전 주민들까지 소급적용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한 순간에 마을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최신뉴스



제주도 위원회 회의록 공개토록 조례 개정 필요



[제주신화산책]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의 신, 미륵



제주도의회, 안동우 예정자에 "선 넘는 元 대권 행보에 직언해야"



통합당의 국회 원 구성 협상거부에 늦어지는 추경..지역신용보증재단 "조속처리 촉구"



조훈배 "도청앞 천막, 철거 못하면 세금 거둬야"

정치적 재화로서의 시간

- 공동체 구성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시간
-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시간
- 관계가 시간의 함수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공동체 구성의 대부분은 시간의 정치 포함
- “얼마나 함께 해야 제주인일까?”
- 공동자원체계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 다양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시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공동자원체계는 없음

집합행동 조정 문제

- 철학적으로 본다면 집합적 동일성 곧 '우리'를 창안하는 구체적인 자원의 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관계를 형성하는 자원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와 공동체 운동의 오랜 관심
- 그에 반해 공동자원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사회문제의 딜레마(social dilemma)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공동으로 구속되어 있는 물리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집단 간의 이해 관계 충돌 문제 --> 곧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조정하여 '우리'를 형성하는 문제(시민 상호간의 공동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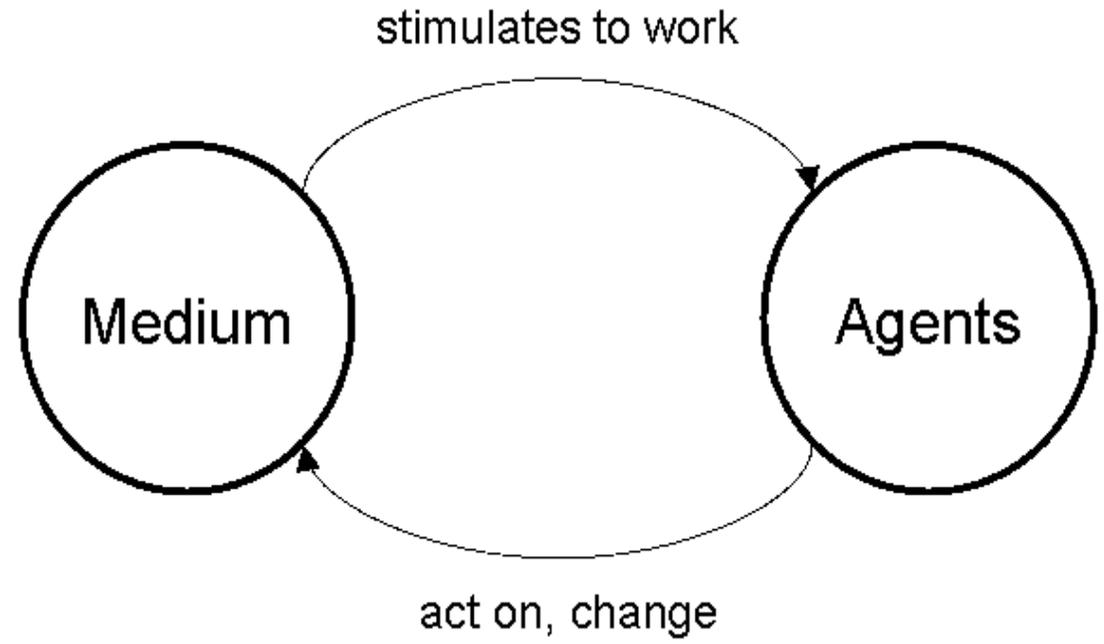
기반시설(infrastructure)

- 기반시설의 혼잡은 기반시설의 물리적 확장을 낳는 경향이 강함 --> 이는 공공의 필요와 공익을 위한 선택으로 이야기됨: 그러나 혼잡은 물리적 확장이 아니더라도 참가자들의 공동조정을 통해 혼잡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함 --> 이는 공동체 공동자원과는 다른 공공 공동자원체계(Public commons)의 가능성을 열어줌



스티그머지 (stigmergy)

- 기반시설 공동자원체계는 그러나 협력을 통해 작동하기는 어려움 --> 협력과는 다른 공동조정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 문제
- 그 가능성을 지는 개념 중 하나가 스티그머지: 다른 행위자가 남긴 신호로 나의 행위를 조정하는 과정 ex) 시장
- 현대 도시 혹은 미래의 과정은 이러한 스티그머지를 자원 이용에 반영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른바 스마트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등은 모두 스티그머지 이용



노동과 시민의 새로운 결합

- 노동체계가 노동시장을 통해 매개되고 있지만, 노동체계가 CPRs 상황으로 진입할 경우에 --> Commons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도 있음

Commonfare

- 노동과 시민을 결합하는 대안적 방향의 하나는 시민노동의 유형을 창출하고 이를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대안노동의 공동관리 양식을 창출하는 것
- 공동자원생활체계(Commonfare)는 그러한 시민노동을 통해 시민 공동의 부를 만들어나가는 대안 생활체계를 지향: 공동자원체계로 동료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공동으로 돌보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생활체계

신자유주의

- 공동자원체계는 그 자체로 관리 곧 경영의 문제를 내포함 --> 이는 공동-경영의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공동자원을 하나의 자본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양식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음
- 공동자원체계에 관한 열정은 기업이라는 형식을 전체사회에 확산하고 일반화하는 역할도 함께 함: --> 자유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제공함 --> 제약 없는 시장 참여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함: 공동체사회와 기업사회의 융합
- --> 교환 VS 경쟁 :

사회질서

- 공동자원체제를 새로운 사회질서의 원형 혹은 상품체계를 대체하는 대안체계로서 모든 사회질서의 출발점으로 바라보자는 견해가 존재: ex) Commonism
- 하지만 나의 견해는 공동자원체계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의 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모든 질서를 공동자원체계로 환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나에겐 제도적 다양성(institutional diversity)이 중요
- 다중심적 체계(polycentric system) --> 나의 필요가 충족되는 다중심적 제도를 형성하여 한 제도에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

제주의 미래

- 제주의 미래를 도민이 결정한다는 도민결정권의 주장이 30년 넘게 그리고 제주의 자율성을 방어하고 확장하려는 운동이 제주 근대사에 피로 새겨져 있음 --> 도민이 결정한다는 건 도민 규모 차원에서 결정한다는 말이기도 함, 그런데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
- 제주의 미래는 실제로 다중심적 조건에서 결정되는 것임: 나-집단-전체? 전체의 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로 결정할 수 있음

생활양식

- 과거의 공동자원체계는 기본적으로 노동양식
- 현대 공동자원체계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가능성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운동과 결합해 있음: 현대의 소비 자본주의 생활양식을 변형해나가는 공동자원을 통한 생활양식이 가능할까? 그것은 무엇일까? --> 이는 현대사회의 위기의 근원에 우리의 생활양식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이해가 깔려 있음
- 노동양식에서 생활양식으로 이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개인의 부가 아닌 공동의 부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 지금과는 다른 생활양식이 출현할 것은 분명 하지만 그 형태와 주도력이 어디로부터 올지는 아직 불확정
- 과거의 생활양식 변화를 위한 운동의 중심 문제는 권력 문제 --> 그러나 현재는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STS(Social-Technological-system)의 문제와 자원 그 자체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상
- 공동자원을 통한 생활양식의 경계: 곧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경계의 지점이 어디일까? --> 하지만 현재 이 생활양식 자체가 낯선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모습과 제도의 형태를 상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기후위기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나오미 클라인 Naomi Klein
이순희 옮김

THIS CHANGES
EVERYTHING

- 전지구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만, 전지구적인 해결책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런 해결책을 압박하는 다양한 규모(scale)의 실천이 가능 --> 촌락(village)의 역할은 무엇인가?
- 변화와 적응: 우리는 변화와 동시에 그 변화에 동료시민들이 적응해나가도록 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 --> 공동자원체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현재 내가 하는 고민